

李, 수도권 중산층 겨냥... '세제 개편·중도보수 정당' 언급

전체 세수서 근로소득세 비중 높아
“초부자는 감세, 월급쟁이 증세 결과”

‘스윙보터’ 주택 보유·고소득 근로자
세금 이슈 전면화 때 보수 선택 경향
지난 대선 때 극대화... 약점공략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클릭’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속세 등 세금 이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토론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최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는 세금 이슈에 민감한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초부자들은 감세하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중산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중산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나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 이슈가 전면화되면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투표 성향이 극대화된 것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31만여표 적게 받았다.

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수도권 한강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중부세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들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이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은 아니다. 스윙보터는 고성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표심도 변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화됐다고 보고, 가장 약한 지점인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간 민주당은 세제 개편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 등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우클릭’ 행보를 종합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부가 증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 감세를 언급하면서 당 정체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드라이브... 尹 부부 공세 강화

법사위 소위서 특검법 심사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목표
尹 파면되면 수사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도록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오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특정한 당선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연관됐

다는 의혹이 제기된 흥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다.

박법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태균씨는 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한 바 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 현

안질의에서 명씨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명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현안질의 개최나 화상회의 등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주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종결일(25일)이 있고, 그 다음 다음날(27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주 법사위는 법안 통과에 바쁘다”며 “그래서 내려갈 틈은 없고, 다음주라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받지 않지만, 만일 파면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특검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권영세 “소상공인 인당 100만원 바우처, 추경 편성 협의 중”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이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 케이대명에서 당 경제협력 민생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할 경우에 장비 구매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생각이 있는데, 그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소상공인연합회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출 1억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에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예산을 지원해서 공과금, 보험비, 관측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유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사업보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바우처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돈 25만원을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경제협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주4일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깊은 비애를 느낀다”며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 노사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에 요청하니까 딱씩 받아서 그들의 편을 든다”며 “공장에서 스팀 다리미로 일하던 분은 일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희는 정동 보수 정당이 온기가 잘 닿지 않는 경제 기층 부서에 어떻게 하면 온기를 전달하고 밝힐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세사업장에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금융 조정, 이자 지원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경제협력민생특위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업체를 현장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